

보도 일시	2022. 9. 22.(목) 12:00 2022. 9. 23.(금) 조간	배포 일시	2022. 9. 22.(목) 12:00
담당 부서 <총괄>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초경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이강욱 (044-202-7521)

추석 명절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운영, 513억 원 청산

- 기관장 직접 지도(102회), 체불청산 기동반(69회)을 통해 45억 원 현장해결
- 대지급금 315억 원 지원,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14억 원 융자

【조기청산 활동 주요 사례】

- ① 천안지역의 공사현장의 하청 건설업체가 7월분 임금 4.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기관장의 지도와 「청산기동반」 활동을 통해 원청 등을 적극 지도하여 근로자 155명이 추석 전인 9.2.(금),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천안지청)
- ② 여수지역 공사현장 하청 건설근로자 70명이 7월 임금 4.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농성에 돌입하였고, 체불청산 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원·하청 노사 관계자를 면담하고 청산을 적극 지도한 결과, 원청이 9.13.(화), 체불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였다. (여수지청)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 22.부터 3주간(8. 22.~9. 8.)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513억 원(9,642명)이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지도를 포함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과 신속한 청산 지원의 성과로 청산금액은 전년 동기(386억 원) 대비 33.0%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청장(지청장)의 직접 지도(102회)와 「체불청산 기동반」의 출동(69회)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45억 원의 집단 체불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의 혐의가 상당함에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 (실적) 체포영장 집행 13건(신청 16건), 통신영장 집행 11건(신청 15건)

한편,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①(8. 29. ~ 9. 8. 전 지방관서)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지도하고, 조선업 원·하청 밀집 지역 등은 간담회나 현장 방문^②으로 기성금 조기(적기) 집행 등 체불예방에도 주력하였다.

- ①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공동 캠페인, 무료 노동상담소 운영, 홍보물 배포 등
- ② 조선업 등 원·하청 현장방문 8개소, 간담회 9회, 설명회 2회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폭넓게 시행되었다.

추석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8. 12.~9. 8.)으로 단축(14일→7일)하여, 315억 원*(6,316명)을 신속하게 지원하였다.

* 체불금액 발생일과 관계없이 집중지도기간 중에 지급된 금액으로 청산 금액(513억)과 일부 중복될 수 있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8. 12.~10. 12.)으로 0.5%p 인하하여 피해근로자 195명에게 14억 원(9.8. 기준)을 지원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체불예방과 청산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 꾸준히 제도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초경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이강욱 (044-202-7521)
			주무관	백승희 (044-202-7538)
<공동>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7554)
		담당자	사무관	백경남 (044-202-7563)